

제428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3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5년8월18일(월)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한정애) 사임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간사 개선의 건
4. 소위원장 개선의 건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7)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8)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5)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9)
11. 2035 NDC 추진현황 업무보고
12.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추진현황 업무보고
13.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위원장(한정애) 사임의 건 3
2. 위원장 선임의 건 4
- 위원장(위성곤) 인사 4
3. 간사 개선의 건 6
- 간사(박지혜·김소희) 인사 6
4. 소위원장 개선의 건 8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8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8)	9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7)	9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8)	9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5)	9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9)	9
11. 2035 NDC 추진현황 업무보고	12
12.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추진현황 업무보고	12
13.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14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자로 김성환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원이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원이 위원님은 8월 12일 자로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 보임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특위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그리고 산자중기위의 간사를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기후위기특위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아직은 환영을 못 받았습시다라는 환영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김소희 위원 환영합니다.

○김원이 위원 감사합니다, 김소희 위원님.

제가 생긴 건 싹닭처럼 생겼지만 생각보다 정책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애 고맙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요 위원장과 간사가 이를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제1차관도 오후 3시 45분 이후에는 이석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여러분 모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입니다.
 성소미 전문위원입니다.
 황충연 전문위원입니다.
 김문경 입법조사관입니다.
 문정호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상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그래도 우리 당 위원님들이 안 오신 까닭은 설명드려야 돼 가지고요.

현재 야당탄압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현장 비상의총이 2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기후특위 회의는 중요해서, 오늘 제가 간사 내정될 예정이어서 제가 혼자 기후특위에 참석하게 된 점 말씀드리면서 현장 의총이 끝나는 대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1야당의 500만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소수 야당으로서 항의와 투쟁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기후특위 회의에 오실 때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안 오시는 바람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를 진행하고 싶어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장(한정애) 사임의 건

○**위원장 한정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3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걸로, 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사회권을 이소영 간사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장, 이소영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소영** 국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 이소영 간사입니다.

2.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2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소영**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선례에 따라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소영** 김원이 위원님.

○**김원이 위원** 위성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소영** 감사합니다.

다른 분 추천하고자 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성곤 위원님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회의 진행을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장님, 회의 주재 부탁드립니다.

(이소영 위원장직무대리, 위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위성곤) 인사

(14시23분)

○**위원장 위성곤**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께서 추천해 주시고 여러분이 선출해 주신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후특위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한정애 전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기후위기를 미래의 문제로 유예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이미 1.5℃가 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임계점이 곧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1.5도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인류 문명이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수령이라는 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자연재해 차원을 넘어 식량·에너지·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친 국가안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EU는 탄소국경조정제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움직이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맞게 될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이제 25년이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35 NDC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취적으로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산업 생태계 구축에 국가 역량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설위원회가 아닌 특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례화 방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소위원회 개편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법률과 예산을 심의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찬 세미나와 같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약속을 지키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말뿐인 계획이 아닌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여야도 진보·보수도 없습니다. 오직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로운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간사 개선의 건과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2035 NDC 추진 현황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 소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후 소위원회 회의를 대비한 자료 작성을 위해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장들께서는 정부 측 좌석 양옆에 마련된 발언대를 교대로 활용하는 형태로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간사 개선의 건

(14시27분)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먼저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간사직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신 임이자 간사님, 이소영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임이자 간사님은 기재위원장 그리고 이소영 간사님은 예결위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기후특위의 든든한 백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 한정에 위원장님께서서는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되어서 정책에 더욱더 잘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소영 간사님께 특별하게 그동안의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기후특위는 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공식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후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입법권과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 권한 있는 기후특위를 만들어 달라는 줄기찬 요구 끝에 마침내 올해 구성이 된 특위입니다.

이 기후특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여러 목소리를 내고 함께 노력해 왔기 때문에 애정도 책임감도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 이렇게 본격적인 특위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특위의 간사직을 내려놓게 되어서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기후특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간사 개선의 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은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해당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박지혜 위원님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소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박지혜·김소희) 인사

(14시29분)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신 박지혜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간사로 선임된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앞서 이소영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특위, 22대 국회에 들어서 우리 의원들의 노력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발족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출발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기후특위 회의 때도 정치

적인 일정과 관계없이 빨리 특위 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건의드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민주권정부가 탄생을 했고 2030 감축목표 달성 국민들께 약속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 앞에 있는 기후위기사태 오늘도 저도 또 쳐다보면서 왔는데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폭우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맡은 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어 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지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신 김소희 간사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된 김소희입니다.

먼저 중책을 맡게 돼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현재 우리 국민들은 폭염과 폭우를 번갈아 가면서 이상기후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국가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 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 주신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글로벌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기술 발전과 연동돼서 매우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는 이상기후의 기후대응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도 감축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국이 기후재난지역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지역 선포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나라의 공간이 튼튼해야 합니다. 나라의 공간은 곧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력은 어떻게 뒷받침이 될까요? 저는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고 이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공간이 튼튼해야, 이상기후로부터 국민들이 기후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후특위가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말씀 주셨던 2035 NDC 목표를 수립할 때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할 때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업이 혁신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이런 지점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 기후특위는 국민과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특히 청년·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게 소통하는데 저 또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기후특위가 그런 소통의 장소를 만들어 주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대응위원회로 대체하는 안도 제시하시고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조직의 간판을 바꾼다고 기후 대응이 실질적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과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의 잣대를 세우는 것을 저희 기후특위에서 제안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후 대응에 있어서 정부 거버넌스가 중요한 만큼 이번 정부 개편안, 환경부·산업부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자들 포함한 공청회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은 기후특위에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어레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후특위가 1년 밖에 진행이 안 되지만 2035년 NDC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 개선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저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힘 간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기후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4. 소위원장 개선의 건

(14시35분)

○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간사님들께서 새로 선임되심에 따라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각각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법 제57조 3항에 따르면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8일 자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소영 위원이 사임하고 박지혜 위원님이 보임되었으며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임이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소희 위원님이 보임되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상 소위원장 개선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장은 이소영 위원에서 박지혜 간사님으로,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장은 임이자 위원님에서 김소희 간사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장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선임되신 소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앞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 팬찮으시지요?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선임되신 간사님과 소위원장님들께서는 각 소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함께 기후특위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37)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8)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45)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329)

(14시38분)

○위원장 위성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각 법안의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서왕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서왕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가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 이후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첫째, 탄소예산을 법률에 명시하고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도
록 하고자 합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이상, 35년까지 65% 이상, 40년까지
85% 이상, 45년까지 95%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심의에 탄소예산 기준을 추가해 목표 설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
니다.

둘째, 탄소중립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환경권 보장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
여 기후위기 대응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축목표 미이행 시 감축 부족분을 차기
연도 목표에 포함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듯이 국가의 온실가
스 감축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우리는 미래세대에 과중
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이라는 법의 원래 취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신속하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서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단말기 자료 중에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정혜경 의원과 서왕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의하고 기본원칙에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명시하며 전 지구적 관점에서의 우리나라의 기여분에 부합할 것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등을 명시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감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혜경 의원안은 30년까지 50%, 35년 65%, 40년 75%, 서왕진 의원안은 30년까지 40%, 35년 65%, 40년 85%, 45년까지 95% 감축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의 대표성 반영 근거 마련,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감축목표 미부합 시 온실가스 감축 개선계획 제출 및 계획의 보완 요구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양 개정안은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점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의 동 법률에 대한 위헌 취지를 고려하여 기본원칙과 탄소예산 반영 설정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개정안과 같이 순배출량으로 규정할 경우 이미 제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달성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협의와 국민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탄소예산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로 탄소예산을 산정하도록 한 후 국가 감축목표 수립 시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3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미래 포럼을 발족하여 감축경로 및 입법 대안을 2025년 11월경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방법, 감축목표 수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및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정부가 제출할 안과 연계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권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이 감축 노력 없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권 시장 현황, 경기변동 등 급변하는 상황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수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율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출권 할당의 업종 구분 단위를 현행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배출권 유·무상할당 판단지표를 배출권 가격변동과 무관한 지표로 변경하며 종전 제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됐던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할당규정을 삭제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및 유상할당 배출권의 조정 근거 마련,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탄소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고 예측가능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며 현행 제도에 부합하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업종 구분 단위를 할당대상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동법 여타 조문에서는 대부분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량 정보만으로 공급 부족 및 과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요·공급의 상황을 조정 기준 중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위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체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되어진 법률안을 각각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와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법률안은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은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박지혜·김소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법률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매우 신중한 세 가지 안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사항을 점검합니다. NDC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입니다.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그 이행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그 설계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산업계와의 조화 속에서 국가 전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 재정의 중심축으로 기금의 효과성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결산 논의를 통해 기금 운용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2035 NDC 추진현황 업무보고

12.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추진현황 업무보고

13.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50분)

○위원장 위성곤 먼저 김성환 환경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먼저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한정에 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 임이자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정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직전까지 위원으로서 활동하다가 환경부에 책임을 맡아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도 어깨

를 더 무겁게 합니다.

세계기상기구의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5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 안면도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이고 매년 3ppm씩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회복하기 어려운 기후변화가 초래된다고 하는 450ppm까지 대략 6~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폭우, 폭염, 산불 등 기후재난은 그 강도를 더해 가며 매년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더욱 절박하게 더욱 시급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인해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어 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앞으로 사회 경제의 제반 영역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탄소중립을 향한 핵심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대전환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그간 추진되어 온 상황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기차 확대 등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설정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반영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 탈탄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도전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각계와 소통하여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배출권 할당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의 감축 효과를 강화하겠습니다.

배출권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여 산업의 탈탄소화와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탈탄소 녹색 문명 전환에 앞장서며 사회 각 주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에서 비롯된 의견은 2035년 NDC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의 상세 내용은 기후탄소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성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지요.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입니다.

2025 NDC 추진현황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35년 NDC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였고 대형 산불, 극한 호우, 기록적 폭염 등 국내외적으로 기후재난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보다 절박하게 기후 대응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기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30 NDC 목표를 책임감 있게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는 참고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23년까지 총 8000만t을 감축하였지만 아직 2030년까지 2억 1000만t 이상 추가 감축하고 또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문별로 전환해서 4400만t을 감축했지만 작년부터 원전이 최대 발전원이 된 영향이 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산업 부분의 감축도 철강·석화·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업종 생산량의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탈탄소 효율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수송의 경우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60만 대 이상 보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CCUS와 국제 감축은 아직까지 감축 실적이 없습니다.

3페이지, 대내외 여건입니다.

UN은 IPCC 6차 보고서 등을 통해서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9년 대비 60%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DC를 제출한 국가는 G20 5개국을 포함해서 26개국입니다. 영국은 선형경로보다 강화된, 일본은 선형경로 수준의 목표를 제시했고 다른 국가들은 선형경로보다 완화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적절한 국내 감축 수준을 놓고 시민사회,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시민사회는 현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과중하게 이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35년까지 66.7%까지 감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산업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 감축률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3월부터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기술작업반을 구성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감축잠재량 분석, 감축 시나리오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2040년까지의 배출량 전망은 전환, 산업, 수송 등 9개 부문을 대상으로 2006년 IPCC 지침에 따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40년까지 연평균 0.2% 수준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배출량 전망을 바탕으로 부문별 감축잠재량을 분석·종합 평가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감축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정책 전환과 기술 혁신을 시나리오의 주요 기준으로 설정하여 감축 수단별로 온건·적극의 강도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파리협정상 진전의 원칙에 맞는 대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을 말씀드리면 전환 부문의 경우에 재생에너지 목표, 석탄발전 감축 수준 등 전원믹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 산업 부문의 경우에는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NCC 등 주요 혁신기술의 도입 규모와 시기 그리고 수송 부문은 2035년도에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등입니다. 건물의 경우 지연된 제로에너지건축 규제와 그린리모델링 확대 수준, 2030 NDC 수립 당시에는 반영하지 않은 히트펌프 보급 목표 등이었습니다.

6페이지, 2035 NDC 검토 방향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은 파리협정 진전의 원칙을 고려하여 2030 NDC보다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이전을 방지하며,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성도 고려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원칙하에 국제 감축은 보충적 수단으로 최소한 활용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과제입니다.

전환 부문은 범부처적으로 재생에너지 추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인허가 절차 개선, 영농형태양광의 기간·주체·대상농지를 확대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을 위한 양수발전과 ESS의 확대 등 계통 보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풍력발전 핵심소재 기술개발과 상용화, 국내 공급망 구축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업의 경우 감축 신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다배출 업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배출권거래제 시장 기능을 통해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인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탈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송의 경우 승용차, 승합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 모든 동력의 전동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신차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보조금, 세제, 화석연료 보조금의 전환 등 전향적이고 일관된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열에너지의 탈탄소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히트펌프 보급이 주요 과제입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하고 주택의 신규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용 전기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기반 확대가 주요 과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플라스틱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 가속화를 위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희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식목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축목표에 따른 경제성 분석도 추진 중입니다. 감축 수단 간의 비용 효과성 분석을 위해 기술적 감축 비용을 분석하고 경제적 효과, 기후·대기 공편익, 재정투자 비용 등도 산출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정부안을 확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탄녹위 심의 등을 거쳐 2035 NDC를 확정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입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 기업별로 할당한 후 기업들 간 거래를 허용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용 등 세부 기준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3기 할당계획을 살펴보면 매년 배출권 공급량이 배출권 수요보다 많아 현행 추세를 유지할 때 4기로 넘어갈 수 있는 잉여량이 1억 40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처럼 잉여량이 많아지면서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는 중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가격이 예상보다 하락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유상할당 수입금도 계획 대비 5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처럼 배출권 가격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새로운 감축 투자 유인이 저하되어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고효율 감축설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이 부족해서 기업에 대한 감축 지원 확대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감축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잉여량을 모두 사용할 경우 2030 NDC 목표 달성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과도한 배출량 전망에 기반하여 2030년 NDC 로드맵에 비례하여 총량을 설정함으로써 내재적 공급 과잉을 초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기업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전에 할당하여 공짜 배출권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한 때문입니다. 또한 공급이 초과할 경우에 배출권 공급을 축소 조정할 수 있는 완충 장치도 없어 배출권 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에 4기 할당계획 기간 동안에는 배출허용총량을 엄격하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로드맵에 기반하여 총량을 설정할 경우 최근 배출량이 감소한 상황과 3기까지 누적된 잉여량으로 2030년 NDC 달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시장 내 배출권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서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안정도 도모하겠습니다.

유상할당은 발전 부분의 경우 해외 사례도 있고 또 명확한 감축 수단인 점을 고려해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 완화와 준비 기간 부여를 위해서 그 수준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발전 이외 부분은 감축 기술의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서 발전 부분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증가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전액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활용하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세는 그간의 사용 실적과 4기 유입 가능량 등을 고려해서 한도를 설정하고 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해서 감축 효율 개선을 위한 기업 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BM 할당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감축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이월 제한은 지속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산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거쳐 9월 말까지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기업별 할당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4년도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전 부처 기준으로 147개 사업, 2조 2156억 원이며 이중 97.5%인 2조 160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환경부 소관 38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7768억이고 7311억 원인 94.1%가 집행되었습니다.

분야별 결산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 저탄소 생태계 조성 분야—17페이지입니다—공정한 전환 분야, 탄소중립 기반 구축 분야 등 4개 분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에서 보고할 것이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존경하는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의 NDC 준비 상황과 기후대응기금 결산 등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탄소중립 이행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 더욱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대안들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산업부의 기후위기 대응 업무현황은 에너지정책실장직무대리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직무대리 조익노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35 NDC,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결산 현황 순입니다.

앞서 발표한 기관과 중복은 가급적 줄이고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2035 NDC 관련입니다.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과 산업 부분,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먼저 무탄소 전원 확대를 통한 에너지믹스의 탈탄소화 추진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여 2035 NDC와 6차 신기본에 반영하겠습니다.

산단·영농형·수상·주차장·지자체 공공부지 등 태양광 입지를 다각화하겠습니다.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신속 처리를 통해 서남해와 제주 등의 해상풍력 단지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항만 인프라 조성 예타 면제 등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애로사항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건물·도심 태양광 등 우수한 태양광 입지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법 제 개정을 통해 뒷받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PS 제도를 계약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204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한 석탄발전 40기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폐지 및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수도권 수요지를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 구축하겠습니다.

해저에 새로운 기술인 HVDC를 활용하여 2030년대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하고 2040년대까지 한반도 U자형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촘촘한 수용을 위한 육상 에너지고속도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HVDC 기술개발과 한전 건설인력 확충, 지중화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등 관계부처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통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산형 AI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산단·농공단지·대학캠퍼스·공항·군부대 등 유형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전력시장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시범 도입된 실시간·예비력 시장 등 선진적 시장제도를 육지로 확산하여 유연성을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 구조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탄소전원에 대한 투자·거래·회수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시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무탄소전원 통합용량시장을 개설하겠습니다.

전기요금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계시별 요금제 확대, 송배전 설비 이용요금 체계 개선 등 요금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기후테크 산업, 탄소중립 산업을 성장동력화 하겠습니다.

청정전력 중심의 전기화, 청정연료 전환 및 이를 뒷받침하는 청정 인프라 분야에서 10대 탄소중립 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 SMR 등 청정전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정수소와 지속가능연료를 활용하여 수송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산업공정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ESS, 전력망, 히트펌프 등으로 전기화학 기반을 구축하고 AI와 CCUS로 탄소중립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산업과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산업의 탄소감축 역량 강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추진입니다.

먼저 주력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부문 NDC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수단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하고, 감축 효율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혁신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탄소감축 설비 투자에 대한 용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기술개발 및 실증, 기업 간 협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업종별 감축 수단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과제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철강 업종은 전기로 조강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을 경감하고, 전기로 전환 시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 수요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멘트 업종은 혼합시멘트 KS 제정, 저탄소 혼합재 R&D, 저감장치 설치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학 업종은 폐플라스틱 수거 및 선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바이오납사 생산 설비에 대한 장기·저리 용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감장치 설치를 보조하고, 공정 대체가스 등 핵심기술의 통합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유 업종은 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한 차액을 지원하고, 바이오항공유 시설 투자 시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다배출업종 이외의 업종은 업종별 핵심 감축기술과 함께 전 업종 공통의 공통 적용형 실증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CBAM 등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감축 설비 구축과 정보 제공, 기술개발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국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내 기업의 탄소배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대한 산업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 및 에너지 부문의 탄소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배출권거래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NDC 달성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2030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배출허용총량 설정이 필요합니다.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연도별 목표와 정합성을 갖추면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분 설정의 경우 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하되 이번에 최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3기 평균 수준의 플러스알파 수준의 적정 수준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배출총량이 3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총량 내 시장안정화 예비분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업계 할당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할당 방식 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상할당은 경제 및 산업계 부담, 에너지믹스 개선, 감축활동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발전 외 부문과 차등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국민과 산업계의 추가 부담 우려와 적응 기간, 그리고 탄소배출 포함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출효율기준 할당의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급격한 감소와 유상할당 증대 등을 감안할 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 수준으로 BM 계수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배출권 운용의 유연성 확보입니다.

국제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 ETS 외 기업의 감축사업 유도 등을 위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파리협정 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이 본격 추진되는데 해외 유망사업 선점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감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상쇄제도를 통해 협력업체의 배출 감축 노력을 유인하여 공급망 전체의 탄소감축 활성화를 유도하고 글로벌 탄소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위해 현재 순매도량의 5배 수준인 이월 제한 규제를 4차 계획기간 내에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탄소감축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기후기금을 활용하여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상향으로 확보된 재원은 발전연소 전환,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ESS와 송배전망 같은 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와 전기요금 지원에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과 산업계에 탄소감축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하여 성장동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의 2024년도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은 46개 사업, 총 7958억 원으로 기금 총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7934억 원을 집행하였고 24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온실가스 감축 분야 1827억 원 대부분은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탄소중립 산업단지 환경조성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그리고 기후변화협약대응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분야의 경우 2398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차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산업·지역의 공정한 전환 부문의 경우 113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98%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있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사업의 경우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등 폐지 및 지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사업비 24억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부문의 경우 2571억 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 사업과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존경하는 기후특위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김종률입니다.

한화진 민간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탄소중립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탄노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 2035 NDC 수립 추진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보고했듯이 현재 영국·일본 등 총 26개국, 그런데 8월 13일 날 솔로몬제도가 제출해서 27개국이 제출한 상황입니다.

대내외 여건 관련해서 추가 두 가지만 보태면, 중간에 지난 7월 달 국제사법재판소에

서 파리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강조를 하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이라든지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5일 날 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했었는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NDC를 수립해라, 그래서 2019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에 60% 정도 예시로 감축하라는 그런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 NDC 수립 추진 상황은 환경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탄녹위의 2035 NDC 의견 수렴과 검토·심의 계획입니다.

그간, 작년도에 2035 NDC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네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분과위원 워크숍, 부문별 전문위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2035 NDC를 검토했다기보다는 기존의 2035 NDC에서 검토했던 방법이라든지 2035 온실가스 정보센터에서 했던 기술작업반 시나리오에 대한 감축 수단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 논의하는 수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개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의견 수렴 홈페이지, 의견 작성 및 접수, 의견 확인 및 검토 이런 별도의 홈페이지를 두고 체계적으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탄녹위의 전문성·다양성을 토대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설명회·공청회·간담회,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다층적이고 입체적이며 또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는 데 탄녹위가 기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의 NDC안이 발표될 경우 이를 토대로 현장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정부 내에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서 탄녹위 심의,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UN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의 논의가 끝나면 이 부분을 토대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탄녹위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인데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회 개요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두 번째, 위원회 실질화 추진에서 이재명 주권 정부에서 위원회인 탄녹위를 실질화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고 탄녹위의 국민참여·소통 창구 역할, 정책 조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국정과제 40번에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 포함돼서 국민참여기구 신설이라든지 정책 조정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 탄소중립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기후대응기금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선 2024년 수입지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조 3058억 원으로 계획 대비 100.8%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입의 경우 자체수입 2647억 원, 정부내부수입 2조 252억 원 등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자체수입 2647억 원 중에 배출권매각대 등을 통해 1877억 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정부내부수입 2조 252억 원 중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조 970억 원, 그리고 교특회계 전입금 3000억 원, 전력기금 전입금 2000억 원, 복권기금 전입금 1083억 원, 공자기금 예수금 319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은 사업비 2조 1600억 원 등을 통하여 지출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오른쪽 표를 보시면 사업비 안에 보면 2조 1600억 중에 우선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8764억 원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및 도시, 국토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미래 유망 녹색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저탄소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61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 노동구조의 전환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탄소 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공정한전환 사업으로 187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기반 조성 및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기반 구축 사업에 477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한 것 중에서 수입과 관련된 결산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과 관련해서는 자체수입 2647억 원, 정부내부수입 2조 252억 원 외에 여유자금 회수 15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은 과태료·과징금 및 가산금으로 인한 70억 원과 지출금반납 지연에 따른 47억 원 등 117억 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출 내역입니다.

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사업비 2조 1160억 외에 기금운영비 27억 원, 정부내부지출 289억 원, 여유자금 운용 114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이월 91억 원은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3억 원, 미지급금 이월 22억 원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465억 원의 경우에는 지급 사유 미발생액 4억 원, 계획변경 등 취소 25억 원, 집행 잔액 등 436억 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위 위원으로 처음 오신, 조은희 위원님께서 오셨는데요. 조은희 위원님께서 기후특위 위원으로서 우선 인사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조은희 위원입니다.

처음 와서 인사한다니까 죄송한데요. 앞으로 계속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특위 활동에 참여하게 돼서 뜻깊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세 경고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위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위 활동이 취약계층과 미래세대, 나아가 민생 안전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이번에 새로 간사가 되신 우리 당의 김소희 간사님 또 이소영 간사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위원 박지혜 간사로 바뀌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조은희 위원님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각 부처의 업무보고 및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반갑습니다. 김원이입니다.

먼저 김성환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의 2030 NDC 계획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환, 산업, 수송 부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달성이 관건인 거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김원이 위원 그중에서도 전환 부분 그러니까 발전 부분이 45.9%예요. 그래서 1억 2370만t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사실 해상풍력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11차 전기본 계획에 따르면 30년까지 풍력 설비 보급 목표가 18.3GW예요. 이호현 차관님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맞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24년 8월에 발표를 했는데 산업부차관님, 지금 현재 착공 중인 해상풍력산업의 올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올해 지금 착공 중인 규모는 한 2~3GW 정도 됩니다.

○김원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입찰 준비를 하고 입찰해서……

○김원이 위원 입찰 준비인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입찰하고 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착공된, 착공을 기준으로 한 해상풍력사업 규모는 현재 0.3GW, 300MW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350MW입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는 거고 올해 착공 중인 게 약 300MW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맞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런 정도의 속도라면 2030 NDC 목표 달성 가능할까요? 그리고 11차 전기본에서 세우고 있는 목표가 실현 가능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일단 전체적으로 해상풍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입찰이 확정된 프로젝트를 원투원으로 밀접 지원해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부는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차관님, 해상풍력 사업이 지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주민들과의 설득 문제도……

○김원이 위원 주민 설득 문제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 계기는 23년 8월에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한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것은 다 발전공기업인 남동발전이 참여하는 거고 최초의 민관 합동으로 투자한 편드였고 그리고 정부의 관심을 방증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해상풍력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때 통과되지 못합니다. 신한우이 해상풍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기대했던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는 더 이상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이러면서 투자를 접습니다.

이번에 산자위 소속의 여야 의원님들 다섯 분이 지금 덴마크하고 영국을 다녀왔어요. 해상풍력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들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베스타스라든가 오스테드라든가 CIP 이런 해상풍력과 관련한 해외 투자기업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기업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24년 8월에 신한우이 해상풍력 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

하면서 한국 시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사업을 줄이거나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단적인 예가 목포신항의 베스타스가 전남도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3000억을 투자해서 6만 평 규모로 라셀 공장을 목포신항에 만들겠다. 그리고 3000억을 투자하겠다. 이걸 MOU를 체결했는데 그 사업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지키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24년 8월에 신안우이 예비타당성 탈락하는 것 보면서 한국 시장에서 더 이상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음을 느끼고 지금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상풍력이 NDC 목표라든가 11차 전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부장관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정부의 의지를 보이게 위해서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전체 풍력이 18.3GW인데 그중의 대략 한 14GW 정도가 해상 풍력입니다. 그런데 현재대로 하면 2030년에 해상풍력에서 실제로 발전이 가능한 용량이 잘해야 3GW 수준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원이 위원** 현실입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목표치를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해상풍력을 특별하게, 전면적으로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통과된 해상풍력 특별법도 그 법에 해당되는 건 대부분 2030년 이후에 진행될 사업이라 그 전에도 사실상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그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이 위원** 저는 하나 더 거기에, 환경부장관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그런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실행계획까지를 세워서 여기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정관 산업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가 제안했던 건데 현재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항만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 부두라든가 배후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해수부 산하의 항만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계획이 늦습니다. 이걸 해수부의 항만계획에 둘 게 아니라 해상풍력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으로 보고 산업부에서 이런 전용 부두, 배후단지 조성 그리고 전용 선박 구축 이런 것들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산업 기반의 SOC 구축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과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 부차관님하고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성환** 이게 이제 어디다 두느냐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해상풍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아까 예타 문제도 있고요. 금융 지원 문제도 있고 국내 산업발전 문제도 있고요. 배후 항만도시 문제도 있고 해서 해상풍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TF를 두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이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원이 위원님……

○김원이 위원 맞는 말씀이고 하여간 그런 정부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 차관님도 한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해상풍력위원회가 설치되고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을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지원항만 한 선석을 하나 만들 때 600MW 내지 700MW 정도를 더 설치를 할 수 있는 커패시티(capacity)가 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인스털레이션 베슬(installation vessel), 설치 선박이 하나가 더 늘어날수록 약 600~700MW 정도 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기재부 제1차관께서 45분에 이석을 해야 돼서, 우선 기재부차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그다음에 김소희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그러면 김종민 위원님 하시고 순서대로 보면 김정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소영 위원님 하시고 김소희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일단 산자부에서 올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해서……

○위원장 위성곤 김종민 위원님, 3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3분만.

○김종민 위원 3분이요? 왜 3분을 해 또?

○위원장 위성곤 기재부 쪽만 3분만 하고 다른 부처는……

○김종민 위원 기재부차관님 조금 시간 더 쓰시지 그래요, 여기 4명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다음 회의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사님께 양해를 미리 바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3분씩 하는 걸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기재부차관 질의 끝나고 나서 또 합니까? 환경부도 얘기를 좀 할 게 있는데.

○위원장 위성곤 환경부는 나중에 2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요.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원래 기재부차관께서 4시까지의 가급적 재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직 20분이 남은 상황이어서……

○위원장 위성곤 4시까지입니까? 45분이라고 하던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4시인데 장소가 여기가 아니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소영 위원 회관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회관입니다.

○이소영 위원 5분이면 갑니다.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역시 우리 전 간사님이……

산자부에서 그 규정 개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LED 전국 옥외 조명을 교체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29년까지 100% LED 교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거지요, 사실?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LED 조명이 전력이나 탄소 배출 절감의 거의 1등 공신이더라고요. 전력 소비의 한 60% 정도를 절감시켜요. 그리고 이것을 다 교체할 경우에 연간 한 1600억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시키는데, 이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한 8700억 정도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자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한 데들은 다 100%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간 데는 막 10%, 20% 한 데도 있고.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런데 보면 예산 사정들이 다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산자부에서 이것 속도를 29년까지 하려고 하면 10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자체 예산하고 국비를 매칭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후대응기금이 좀 있는데 이것을 일부라도 매칭해서 속도를 좀 촉진시키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도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 보기는 해야 되는데 기재부는 이런 방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절감이 되잖아요. 절감이 돼서 지자체에서 수익이 되는 건데, 단지 예산 배정이 안 돼 있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민자 유치를 좀, 길을 터 줘서 민자 유치를…… 이것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지자체가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면 이것을 뛰어…… 민자를 유치한다 그러면 뛰어들 데가 되게 많아요, 이것은 되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9년까지 갈 것도 없이 또는 29년에 목표가 달성이 될 수도 있고 또 28년에 1년 조기 달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여쭙볼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말씀 주셔서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 민자 유치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 상황들 한번 모니터링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김종민 위원 지자체가 잘하는 데들, 단체장이 여기에 깨어 있는 데들은 목표 달성해서 80%, 100% 이렇게 가는 데도 있고 어려운 데는 아예 진도가 이삼십 프로밖에 안 나간 데도 되게 많습시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가로등 조명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직접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ESCO,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하거나 또는 아웃소싱해서 하는 방안 등 제도적 개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예.

그리고 환경부장관님께 잠깐 여쭙볼게요.

지금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가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됐어요. 결론이

안 난 모양이지요, 아직?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게 제일 예민한 문제여서 그날 발표하면 아마 다른 뉴스가 다 그것으로 덮일 가능성도 있었고……

○**김종민 위원** 아, 그래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또 약간 미세 조정해야 될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김종민 위원** 결론은 났나요, 지금?

○**환경부장관 김성환** 큰 틀의 대강은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대통령실이 책임 있게 지금 마지막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산업부에서 에너지와 기존 제조산업 간의 연계와 협력, 이게 같은 부서에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의 이견이 정리가 됐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대체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사 다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선거 때 국민하고 한 약속이 있고 그 취지에 맞게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를 총괄하는 부서와 에너지 부서를 같이 할 때 탄소를 저장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더라라고 하는 세계적 통계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김종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덧붙이면……

○**환경부장관 김성환** 또 그것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협업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만약 그런 방향을 잡고 있으면 다행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기존 제조 산업과 에너지를 같이 가겠다는 것은 기존의 에너지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발상하고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에너지 산업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으로 탈탄소 에너지 산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산업적 전망과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 점을 꼭 잘 얘기해서 부처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

○**위원장 위성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김정호 위원** 올해 기후대응기금 규모가 2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2조 6000.

○**김정호 위원** 예, 2조 6224억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김정호 위원** 이게 GDP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GDP가 지금 이천육칠백조 정도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0.1%에 불과하잖아요. 국제에너지기구가 각국에다가 GDP 대비 최소 2.6%에서 10.2% 수준으로 투자를 권고하고 있지요. 거기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기후대응기금이 부족하고 턱없이 미흡하잖아요.

올해 배출권 매각 수입이 계획은 3487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7월 말 현재 세입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58억. 13.1%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가 한 15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1조 원 정도가 이쪽으로, 기후대응기금으로 와야 되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이후로 이 세입도 30%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후대응기금이,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들어와서 계속 격감했거든요. 이 기금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지 에너지 취약계층에 바우처로 쓴다든지, 어쨌든 기후위기대응기금이 계속 늘어나도 턱없이 부족하는데 기재부가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확보나 운용을 너무 정책 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정책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질책을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빈발하고 격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늘리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계속 노력 중인데 전체 규모 속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세의 경우에도 원래 7% 정도로 돼 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좀 초과해서 더 수입으로 잡고 있다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 자체도 작년에 비해서 한 9% 증액을 해서 다른 부분보다 증가율이 좀 높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더 많은 노력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김정호 위원** 든든합니다. 축하하고 기대가 매우 큼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김정호 위원**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뒷걸음질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 배출권거래제가 탄소 배출 감축하거나 지구 온도를 저감시키는 유인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되는데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배출권 가격이 올해 현재 톤당 한 8300원 되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1만 원이 안 됩니다.

○**김정호 위원** 1만 원이 안 됩니다. 유럽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공짜 무상할당 이게 90%잖아요. 무상할당.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무상할당이 전체, 유상할당이……

○**김정호 위원** 10%.

○**환경부장관 김성환** 6 대 4인데 그 60% 내의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아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6 대 4입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러니까 발전 부분이 40%, 비발전 부분이 60%인데 비발전 부분 중에 무상할당이 90%입니다.

○**김정호 위원** 무상할당 부분을 대폭 줄이고 유상할당을 늘리자고 하는 게, 지금 4차 할당계획의 목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향 수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 밝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김정호 위원** 발전 부분하고 비발전 부분을 차등을 두어서 발전 부분은 조금 더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서 가속화시키고 산업 부분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차등을 둔다 이런 정도 대강의 방향은 아까 오후에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편으로는 견인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균형 있게 부담을 줄이면서도 무상할당 비중을 낮추어서 적극적으로 이게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확실하게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짧게 말씀드리면 전체 탄소 배출의 소위 ETS, 그러니까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들어와 있는 게 약 70% 정도 됩니다. 73%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발전 분야가 40%고 비발전 분야가 60% 정도 됩니다.

발전 부분은 유상할당이 배출권거래제의 10%였는데 그 배출 비중이 너무 낮아서 이것을 대폭 상향하되 점진적으로 상향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대폭 상향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비발전 분야도 탄소누출업종, 소위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업종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무상할당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무상할당이 남아돌아 가지고 그것으로 소위 이익을 취하는 그런 기업과 분야들이 좀 있었습니다.

4기에는 특히 무상할당 하는 부분도 엄격하게 무상할당의 총량을 규제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익을 보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유상할당 비중도 대폭 높여 나가서 전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유명무실화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내용을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기재부차관님 시간 없으시니까 제가 5분 안에 딱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 기재부가 기후기금 총괄 관리 부처이기 때문에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기후기금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함께 설치된 기금이고 22년부터 편성됐으니까 올해가 4년 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기금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동안의 이 기금 편성·운영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이제 제대로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기금 규모가 2조 원대인데 규모가 작다 크다 이 얘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문제는 2조가 아니라 20조가 있어도 이게 온실가스 감축에 딱히 제대로 기여를 못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중요한데……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처음 기금이 만들어질 때는 기금 규모가 충분히 커질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이렇게 용도를 다양하게 잡았었고요. 온실가스 감축, 기업 지원, 일자리 전환, R&D, 금융지원, 교육·홍보, 국제협력까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4년 동안 규모가 계속 2조 원대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국가예산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용도를 넓게 쓰려면 규모가 좀 커져야 되는 게 맞고 규모가 작다면 용도를 좀 좁혀서 구체성 있게 운용이 돼야 될 텐데, 기후기금은 규모는 쥐꼬리만 하면서 용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일단 기금의 역할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가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예특회계, 환특회계, 전력기금 사업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거의 똑같은 사업이에요.

노후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 기후기금사업, 노후 민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 예특회계사업, 계정이 어떻게 왜 나뉘는 건지 아무도 설명을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력효율 개선사업인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 전력기금,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면 기후기금. 왜 하나는 기후기금으로 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제가 ‘이 기후기금에 들어와야 될 사업을 구분할 기준이나 지침이 있냐?’ 이렇게 기재부에도 물어보고 각 부처에도 물어봤는데 특별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후기금만의 차별화된 대상, 운용기준 이런 게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기금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들도 신규로 발굴된 사업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사업을 주머니만 옮겨서 지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기후기금 상위 10개 사업 중에서요 신설된 사업은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환특·예특에서 그냥 계정만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으로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업이거나 중장기적인 사업이거나 이런 식으로 운용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기후대응기금 전체 사업 중에서 1년 단위의 그냥 일반회계랑

똑같은 계속사업이 44%, 중장기적인 안정성이 중요한 R&D 사업 같은 경우에도 5년 이내가 66%. 그러니까 차이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색도 없는 사업을 1년 단위 계속사업 위주로 채워 넣을 거면 기후기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금의 금액 규모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 사업의 구체성을 마련하고 기후기금만의 독창적인 사업 구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 방향성에 동의합니다.

○이소영 위원 해외 기금들을 좀 보니까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사업 숫자를 우리보다 많이 줄이고 중장기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EU 혁신기금은 한 5.6조 원 정도짜리인데요, 10년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감축이 가능한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는 게 콘셉트고요. 일본의 녹색혁신기금도 2.4조 원짜리인데 10년간의 연구개발 실증사업 기준이고 이런 단기 정부 지원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이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과 관리 책임을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차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우선 먼저 기금이 다른 사업에서 단순히 이관받았다라는 건 아마 연혁적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재원을 만들 때 각 회계에서 받아 오다 보니까 그 회계에서 쓰는 예산과 사업을 같이 받아 온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환하는 과정으로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하던 사업도 타 기관으로 이관, 타 회계로 다시 돌려 주거나 이관하거나 하고 효과가 떨어지면 줄이거나 하고 새로운 걸 발굴하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노력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녹색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직개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차관님, 기재부에서 기후대응기금 계속 관리하고 싶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기금의 설립 목적이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김소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신 결산 주요 내용 자료가 너무 허술합니다. 이래서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이 뒤에 참고자료로 붙이신 세부사업 수 147개에 대한 평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자료를 좀 더 제출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몇백 페이지짜리를 저희가 다 보기는 봤는데 그중에서 제가 지금 적절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내부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진행하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김소희 위원 올해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

○김소희 위원 제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분들 다 연락 드려 봤고 다 자문받았고요. 제가 기재부에다가 기금운용심의회 자문의견서나 뭐 이런 것들 제출해 달라고 요청 드렸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회의록 자체가 없다고. 그런데 기금운용심의회는 실제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자문위 올해 한 번밖에 안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 번 열리면서 2시간 정도로 이 사업들을 다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재부가 이 기후기금 대응에 대해서는 이해는 좋으나 자문위원들이 이걸 평가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 이 147개에 해당되는 사업을 평가해서 제대로 된 돈을 쓰게 하려면 일단 시간을 길게 주고, 자문위원들 간에 논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평가 체계, 사업 평가 환류 체계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대부분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환경공단이 오랫동안 기후대응기금센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역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김소희 위원 잘 모르시지요? 실제로 환경공단 기후대응기금센터에 물어보니까 그냥 약간 정리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6개 부처에서 사업을 다 제출받아서 기재부가 이걸 총괄 관리하는 거잖아요. 환경부도 사업을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사업을 제출하는데 환경공단이 또 기금 운용을, 조직 관리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좀 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실제로 기후 대응 관련해서 기후대응기금센터, 환경공단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초반에 기재부가 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환경공단의 지원을 받기로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이소영 위원님이 보여 주셨던 해외, EU의 이노베이션펀드라든지 모더니제이션펀드 같은 경우는 독립기구가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독립기구. 그 독립기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은데 기재부가 이 기후기금 대응에서 정말 진심이고 열의가 있으시다면 기재부랑 별도로 된, 환경부 산하가 아닌 기금을 운용하는 독립기구를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외국 제도 등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제가 드리고 싶은 기재부 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사합니다.

○**김소희 위원** 나머지 쓰겠습니다.

탄독위 차장님, 여기 향후 주요 일정을 보니까 9월 17일에 ‘2035 NDC 정부안 수립 추진 현황’, ‘4차 배출권 할당 계획 (잠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예.

○**김소희 위원** 그런데 발표하실 때 촘촘하게 의견수렴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거든요. 촘촘하게 의견수렴하는 일정들 산업계, 다른 것 다 지금 일정 나온 것 있습니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아직…… 우선은 총리님 일정이어서 잠정 한 달 뒤에 잡아 났고요. 보시면 잠정으로…… 그러니까 4차 배출권 할당 계획 같은 경우……

○**김소희 위원** 짧게 해 주시고요.

산업계 의견수렴은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아니, 정부안이 나오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정부안 언제 나오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정부안도 없고요. 실제로 오늘 보고 주신 자료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힌 자료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레이지를 좀 주시든지 이 안을 가지고 기후특위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뭔가 숫자를 좀 주시든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러프하게 레이지를 좀 주셔야 되는데 여기 숫자 나온 것은 시민단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한 60% 이상 되는 숫자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9월 안에 뭘 하시겠다고 하는 건 그냥 국민들 우롱하는 수준이거든요.

일정 부분 이후에 다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예.

○**위원장 위성곤**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이호현 차관님,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요금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하시고 지역별 전기요금을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지역별로 전력 공급하고 생산하는 것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하고 수도권이라든지 비수도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서 어떤 가격 시그널을 줌 줘서 전력 공급이 많은 지역은 전력 요금이 좀 싸지고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은 전력 요금이 좀 높아지는 가격 시그널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런……

○조은희 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조은희 위원 용역은 언제 나오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관계부처 협의나 탄핵위라든지 기후특위에 보고……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거예요, 예상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상은 현재 내년 정도 일단 안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게 각 지역별로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냥 몇 줄로 보고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요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거거든요. 신중하게 좀 봐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4일 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블라블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시사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장 인상 계획은 아니고 장기 필요성 취지라면서 또 한발 물러섰어요.

지금 차관님이 용역 중이니까 내년에 부처별 협의해 보겠다는 거랑 스탠스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사인을 잘못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에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오늘 보고드린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든지 NDC 목표를 여러 가지 상향을 조정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좀 보여지고……

○조은희 위원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것은 당장 단기간 내에 국민 경제 여건이라든지 유가라든가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통령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라,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제도 개편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 기후 대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은희 위원 답변을 조금 빨리빨리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혁신경제 주요 과제가 AI고속도로, 독자AI 생태계 구축, AI바이오헬스, 가히 AI정부잖아요. 그런데 한손으로는 AI에 올인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손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을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많이 상승해서 AI정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걱정도 하는데 대안이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AI 도입 이런 걸 통해서 기후 대응을 철저히 하면 전기요금이 무작정 전

적으로 오르는 방향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저희가 전기요금을 절약하든지……

○조은희 위원 지금 차관님은 공자님 말씀 하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낮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차관님 그 말씀을 듣고,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차관님은 내년 정도에 각 지역별로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겠다, 그러면서 또 기후 대응하고 이러면 전기요금 인상이 좀 줄어드니까 AI정부에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인데요. 무책임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또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찾아서 또 AI 등 신기술도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게 공자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라 하셨는데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하거나 들은 바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저는 동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잘 몰랐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조은희 위원 불과 2년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 폭탄이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그때 산자부에 계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지금 산자부에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그때는 민생 폭탄이고 지금은 착한 인상이다’ 관점에 동의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당시에든 탈원전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파장이 컸어요. 한전은 그때도 수십조 적자였고요. 오히려 올해는 영업이익이라든가 내고 있는데……

30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예,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결국은 국민이 대가를 더 크게 치를 수가 있어요.

혹시 정치 계산을 우선하면서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대통령이나 차관님이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산업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인상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줄일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도 분명히 있다면……

○조은희 위원 어쨌든 올해는 인상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올해 경제 여건, 국민들의 여건들을……

○조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인상할 수도 있고 내년에도 인상할 수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산자부차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하신 겁니다.

다음에 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 중에 최고 전문가가 장관님이 되셔서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2035 NDC 목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편에서는 산업이나 경제에 부담을 너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거고 또 한편에서는 기존 2030년 목표도 너무 취약했고 또 그마저도 달성 가능하나, 35년 이후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목표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의 갭이 커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만족시키는 안을 만드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가 책임 있게 국제사회에다 내놓고 또 우리 국내에도 분명하게 그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정부안은 잠정적으로 정해진 거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아직입니다.

○**서왕진 위원** 아직입니까? 정부 내에 그러면 부처 간 논의가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왕진 위원** 그렇군요.

COP 전에 국내 논의도 다 완료하고 발표하고 COP 가져가는 걸로 예고까지 했는데 남은 시간 안에 그러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앞으로 대략 한 달 이내에 정부부처 협의를 마치고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을 해서 공론화를 하고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탄녹위 의결까지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11월 10일 전후가 COP30 회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9월 중에는 국회로 올라오겠군요, 안이 공개가 되고?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알겠습니다.

35년 NDC안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지난 8월 현재에서 불합치 판정을 해서 49년까지의 단계적 안도 내놔야 되는데 그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2035 NDC 목표를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 헌법불합치와 관련돼 있는 31년부터 49년 계획도 그 내용과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현재 판결 내용을 보면 아주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체가 전 지구적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해야 한단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 과

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할 것을 현재가 명시적으로 선언에 넣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2030년 목표로 정했던 것처럼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임의적인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제사회가 1.5℃를 넘어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필요한 총량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설정해야 되고 그것도 미래에 미루지 않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감축목표를 단계 단계별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기왕에 우리가 탄소 감축목표를 정하는 방법론 그것이 적절하고 과학적인가, 현재의 지적에 대해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으신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탄소 감축에 대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거의 후퇴하다시피 해서 그 3년의 시간을 만회해야 되는 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큼니다.

그래서 2030년 NDC 목표 40% 감축을 달성하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화해도 NDC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런데 2035년 목표를 이제 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구적 목표나 미래사회의 부담까지를 감안하면 그야말로 뼈를 깎는 각오를 해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이런 문제를 다 감안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려고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한다 이게 아니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1.5℃를 넘지 않기 위한 전체적인 목표 또 그중에서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상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설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또는 국제적인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그래도 적절한 정공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현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원칙적 접근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다시 현재 위헌소송을 내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또 똑같은 불합치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탄소 예산과 이 방법론을 우리 감축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해서 실제 달성할 수 있느냐, 실제 목표 설정 수치를 얼마로 하느냐와 별개로 방법론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 취지 말씀은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것을 놓고 계획을 세우면 실제로 우리가 너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달성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 철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문제라든지 석유화학 분야에 있어서의

NCC를 정교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매우 어려움이 큼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접근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국내가 최대치를 끌어올렸을 때의 산업경쟁력과 탄소 저감을 하는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과정에서 계획안을 낼 때 국민적인 이해와 양해 그리고 또 의지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성곤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말씀 좀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탄소중립이나 기후 완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탄소중립 되지 않을 때 인류가, 혹은 우리가 살 터전들이 망가지고 인류가 절멸할 수도 있다라는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기후 완화, 탄소중립과 적응전략 사이의 최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나 재원들은 한정돼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피해를 가장 막을 수 있을까가 제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후의 영향들은 중국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생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올라가서 생명을 잃게 되고 고통 속에 빠질까라고도 계산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경제적 충격으로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정책이니서티브라는 글로벌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이 추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2100년까지 4℃ 상승 시나리오에 따르면 예측 피해액이 2328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최대 320경 원 정도에 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기온 상승을 우리가 1.5℃로 어떻게든 제한을 하면 150경 원의 피해로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비용이 40경 원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하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 경제적 피해도 한 4배가량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한쪽으로 나머지, 170경 원을 줄일 수 있었을 때 나머지 150경 원 그것과 연관되는 또 수많은 죽음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절반은, 320경 원 중에 기후 완화가 170경 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기후 적응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타깃으로 할 것은 나머지 150경 원, 왜냐하면 150경 원의 전체적인 피해만으로도 전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은 기후 적응 메커니즘이 기후 완화라는 노력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포괄적 중장기 기후영향평가와 기후, 우리는 아직 기후가 정확하게 우리 경제 충격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을 얼마나 죽게 만들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해양대기청 같은 경우는 2주에서 수개월 혹은 3개월에서 2년 단위의 중장기 예측체계를 지금 고도로 발전시키고 있고 미국에 국한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국 나름대로 중장기 기후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필요하고 또 예측된 것에

따라서 전 부처를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쭙보고 싶은 것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이런 기후 적응과 재난위험 경감, 디재스터 리덕션(disaster reduction)과 같은 부분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담길지 혹은, 사실 기재부차관님께 얘기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기후대응기금도 23년도에 기후대응기금 중에서 사실상 기후 적응에 쓰인 돈은 23년에 7.6%에서 25년도에 6.3%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인 게 기후 재해로 인한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안겼지요. 그랬을 때 사전 적응 투자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사실 6.3%도 뜯어 보면 사실상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아니면 국민 실천 같은 조금 피상적인 내용들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재난과 경제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킬지에 대한 문제들은 전혀 계획들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앞으로 만들게 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특히 적응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할 때,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재난이 오기 전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 2026~2028 중기계획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향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유럽과 다른 선진국에서 만들어지는 기후대응기금 혹은 유사한 용도처를 가진 예산의 비율들이 얼마나 균형을 잡고 있고 한국은 여기에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앞서 이소영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돈주머니가 여러 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기후대응기금이 있고 에너지특별회계도 있고요 또 교통환경에너지특별회계도 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있고,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돈주머니들이 오가면서 어느 사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외람됩니다만 환경부 더러 그것을 전체를 다시 한번 재편해서 보고해 보라 그랬더니 이게 코끼리 앞발인지 뒷발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이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에서 기후의 대응, 감축하는 것과 적응하는 게 있는데 외람됩니다만 저는 적응이라는 표현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약간 수동적인 표현이어서 기후 적응하면 잘 느낌이 없는데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 그러니까 산불, 폭염, 극한호우, 가뭄 이런 게 거기다 갖다 놓고 적응이라는 표현을 쓰면 영 안 맞습니다. 산불에 어떻게 적응합니까? 홍수에 어떻게 적응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축과 대응, 그러니까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으로 소위 기존에 적응이라고 표현했던 그 각종 대책도 바뀌야 된다. 그래서 영어를 직역할 일이 아니고 적응보다는 그런 현상에 대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대응으로 그 영역도 바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4차 계획을 곧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도 원천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시기적으로 오는 불가피한 소위 적극적인 대응 정책도 세워야 될 텐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5℃는 사실상 돌파

했고 이대로 가면 2℃를 돌파하는 게 6~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7년 후에 2℃를 돌파하면 전 세계 경제가 붕괴하는, 아까 통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붕괴하는 시점으로 가면 이것은 실제로 거의 대응하기조차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 홍수로 예를 들면 무슨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게 무슨 4대강을 넓게 파고 지천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문제여서……

전체적으로 제 느낌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 소위 450ppm을 정점으로 해서, 2℃를 정점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350ppm까지 낮추기 위한 노력 범위 내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함께 세우는 그런 유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조금만 보충하면 적응대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환경부로 치면 여러 가지 소위 물관리대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보면 이 사업과 같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참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 감축과 적극적 대응을 어떻게 밸런싱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 차원에서는 검토를 많이 못 해 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고 특위에 공식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장관님 고맙습니다.

차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위원장님 선출할 때 제가 없어서 죄송한데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위성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李憲昇 위원 아니요, 지금 해야지요.

○위원장 위성곤 예.

○李憲昇 위원 축하한다고 말씀드렸고.

장관님도 되시고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축하드리고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감사합니다.

○李憲昇 위원 장관님, 유엔에 우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하는 것 그것 원래 언제까지 제출하게 돼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원래는 2월 달인데 아무래도 정부 개편도 있었고 내부의 논의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늦습니다만 늦어도 COP30 회의 전에는 공론화 시기까지 있으니까 역산해서 보면 9월 중으로는 일단 정부 초안을 만들고 또 공론화 과정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해서 10월 말까지는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원래 좀 늦어졌지만 그래도 한 9월까지는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늦어진다고 말씀이지요?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EU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정부 초안은 9월까지는 확정하고 그리고 공론화 과정들을 거쳐서 10월 말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4위에 있는데……

○환경부장관 김성환 4위는 아니고……

○李憲昇 위원 4위, 4등 정도……

○환경부장관 김성환 9등……

○李憲昇 위원 9등입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李憲昇 위원 그러면 제 자료가 잘못됐네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감도 좀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지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2035년 NDC 수립을 위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게까지 시나리오를 다섯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최소한의 책임과 최대치의 역할 사이에서 각 분야별로 어디까지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2035년까지 NDC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마련된 시나리오지만 일반인들에게 미리 공개를 해 가지고 검증하는 그런 절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 안 나오시고 사무차장님 나오셨습니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예.

○李憲昇 위원 2010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난 13년 동안에 정부에서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여러 번 수립하면서 총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제가 국회 보고서에다가는 한 111조 정도……

○李憲昇 위원 111조 정도 되지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예.

○李憲昇 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투자계획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왔는데 이때까지 투자한 결과, 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 이것 발간했는데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지난 7월 29일 날 발간됐고 그 자료를 회람했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종합적인 평가 결과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관계부처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예, 회람시켜서 관계부처에서 4차 기후대책, 적응대책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에서 5년 단위로 대책을 발표를 하는 것 맞지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예, 5년 단위로 기후적응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이렇게 117조에 가까운 거액의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목표 대비해 가지고 집행률을 따져 보니까 매우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전혀 관련 없는 사업들까지 거르지 않고 반영을 시켜 가지고 사업 집행실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위원장님 혹시 아시나요, 이 내용?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그러니까 기존에 기후적응대책 수립할 때 관계부처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총합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거액으로 돼 있고 하나의 어떤 단일의 성과지표라든지 이것으로 제시를 못 하고 개별 사업별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 적응대책 수립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결론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중장기 정책 목표하고 또 이에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사업 관리의 틀을 바로 세워야 할 것 같고요. 또 기후위기 적응 R&D 투자 비중을 높이고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플랫폼하고 재해지도 데이터를 연계해 해 가지고 앞으로 기후정책을 수립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예,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애쓰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난 7월에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서 두 분이 폭우로 사망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426.4mm, 사상 최고라고 그러합니다. 쏟아졌지요. 광주의 연평균 강수량이 1380mm니까 넉 달 동안에 올 비가 그냥 하루에 쏟아진 겁니다.

요새 보니까 강수량은 크게 늘고 강수일은 줄어든답니다. 이게 다 기후위기 때문이겠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일 텐데, 하천 범람이나 도로 침수나 이른바 도시 홍수가 대개 일상이 지금 돼 버렸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한 도시에서 나타난 기후위기의 현주소인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이걸 지금 하필이면 저희 회의하고 겹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이게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올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제가 광주라는 도시의 역사를, 이 대응하는 역사를 잠깐 봤더니 물순환 시범도시도 하고 도시안전 선도도시도 해 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하는데, 심지어는 습지정원을 한 1000개 정도 만들어 보자 또는 물이 잘 투수가 될 수 있도록,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

보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 잘 안 됩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아마 적응이 아니고 적극적 대응이라고 쓰자고 그러셨지만 어쨌든 지금 환경부에서 쓰는 용어로 하자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적응대책 총괄 부서가 환경부 맞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민형배 위원** 적응이든 대응이든 하여튼 대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예산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민형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예산 구조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크게 보면 사전 예방 영역이 있을 거고 적응이나 대응 영역이 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예방이나 대비하는 이 영역 쪽의 예산은 줄어들고 사후에 대응하거나 지원하는 이런 사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세부 내용까지 잘 몰라서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 표를 보시면 그게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저것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틈은 없고, 어쨌든 보면 연도별로요 2023년에 6조 5000억 정도에서 지금 2025년에 7조 9000억 정도로 늘었는데 문제는 사후성 지출, 그러니까 예방이 아니고 사후 대응 지출이 구조가 계속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아시지요? 예방 투자가 사후 대응 투자보다 효과가 한 서너 배라고, 우리나라에서 서너 배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15배까지 나온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도 재해예방사업 투자는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한 이 비용이 거의 그대로인 상태, 이 구조가 되게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살펴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이것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도심 홍수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불투수면이 크게 늘고요, 도시개발 하면 크게 늘고 배수 체계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 그래서 물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도시 홍수가 나는데 그러면 하수관로 확충이나 빗물펌프장이거나 아까 습지 조성이나 또 저류지나 이런 현장의 인프라를, 사전 예방·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쪽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현상이 막 도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예전 강수량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대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쪽에 예산을 크게 늘려서 지금 예산 구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 말씀……

○**환경부장관 김성환** 지난번 극한 호우가 있고 나서 대통령님 주재 회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위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 자체가 무의미하다, 모든 곳을 다 극한 호우가 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전체 대응 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의 특히 홍수 관련해서 인프라 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우선 가장 취약한 곳, 예를 들면 도시로 치자면 저지대들, 물이 몰릴 수 있는 곳 그런 곳부터 빈도를 아예 조정해서 그런 곳부터 일종의 대심도 터널을 만든다든지 그런 비가 왔을 때 하수 용량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그래서 취약한 곳부터 기존에 50년~100년 빈도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이상으로 높여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의견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도 강남 일대하고 광화문 일대, 저지대들은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관악구도 도림천 같은 데는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광주도 아마 그런 지역부터 추가적으로 중앙정부 예산과 광역시도 예산을 포함해서 새로운 대책을 더 빨리 더 폭넓게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위성곤** 예.

○**민형배 위원** 어쨌든 예산을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대비·예방 쪽에다 초점을 맞춰 보세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 예산 구조는 세부적으로 왜 그런지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위성곤 위원님, 위원장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늦게 참석하다 보니까 회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026년 1월 1일부터 4기 배출권에 대해서 실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기 ETS가 지금 시작될 건데 그와 관련돼 갖고 지금 캡(cap)이 설정됐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유상할당이 얼마나 됐는지……

○**위원장 위성곤** 질의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야만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질의는 맨 마지막으로 돌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장 위성곤** 요청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제가 왜 요청을 합니까? 위원장님이 요청하셔야지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님이 정부 측보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하시는 거지요. 그 자료 없이는 제가 오늘 이 전체회의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 줘야 그것을 보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자료 갖고는 질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 수박 곁핥기 식으로 어찌고저찌고 뭘 잘못했니 해 봤자 소용없는 거고 새 정부인 만큼 여기에 관련된 새로운……

8월 14일까지 계속 당정 협의도 했고 부처 간의 협의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면 진전된 얘기라도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여기서 탄독위에다 부탁을 하든 아니면 산자위든 우리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료 좀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잠시 내려갔다 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장관님, 배출권거래제 관련 계획, 지금 작성된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제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이 4차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기존 부처의 협이나 간담회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자료를 저희가 다 제출을 하게 되면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로 노출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저희가 얼마든지 보고드리고 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만 세부 내용을 다 내놔라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대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게 주요 쟁점인데 뭘 갖고 그러면 질의하라는 얘기에요?

○위원장 위성곤 오늘 그 내용을 질의하시고 쟁점을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지금……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왜냐하면 정부가 안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확정하지 않은 논의되는 안을, 열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스무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임이자 위원 옛날에는 민주당은 더 했거든요, 더 심했거든요.

○위원장 위성곤 옛날 민주당이 아니고 지금 저희는 새로운 민주당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 뭐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다시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좋으니까 개요라도 대충 캡은 어느 정도로 갖고 갈 것이며 유상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충은 그래도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김소희 위원 의원실하고……

○임이자 위원 국회의원한테 그 정도는 알려 줄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더더구나 저는 또 기재위원장이예요. 그것을 빨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대충적인 거라도 열개라도 좋으니까 적어도 6시까지 주시면 제가 그것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받으시지요, 관련해서.

○임이자 위원 왜 그러세요. 이재명 정부 새 정부라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원하시는 자료를요 충분히 좀 제공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위성곤 예.

○염태영 위원 저는 기후위기특위는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위원회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불필요한 감정이나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별안간 질의 순서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별안간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내놓을 수 없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 갖고 또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되고 이런 일만큼은 우리 기후위기대응특위에서는 저는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의 제출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준비된 것을 갖고 하면 좋지 별안간 요청하고 바로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우격다짐이고 억지스러워서 적어도 기후위기대응특위에서만은 그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장관님, 이렇게 전문적 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다가 또 장관을 맡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기대도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염태영 위원 지금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 맞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염태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에 따르면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 감축목표가 평균 44%로 이렇게 보고받았을 텐데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라는 것 이해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44% 이게 무슨 수치……

○염태영 위원 시군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때 그때 관리권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44%를 감축목표로, 전체로 평균 내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제가 이 보고서는 처음 봤는데요. 제가 돌아가는 대로 꼭 챙겨 보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이것은 목표로 보면 시군구가 관리권한 배출이라고 하는 전제를 담지만 어쨌든 의욕적인 수치 같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놓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리고 기후대응기금으로 환경부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염태영 위원** 광역은 17곳 모두 지원을 했는데 기초는 올해 10곳을 포함해서 40곳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염태영 위원** 그런데 17개 광역으로 봐도 80% 이하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데도 여러 개가 되고요. 그리고 기초지자체 수로 보면 226개 중에서 40개니까 아직 80% 이상 이, 이것도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맞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역량 강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또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보다 지역 실정을 감안하고 역량과 또 그동안의 성과를 반영해서 차등적 지원도 해야지만, 확일적 지원이라는 것이 늘 실제 지자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동안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성과 위주로 좀 더, 이후에 지원할 때는 차등적 지원도 검토를 하셔야만 보다 의욕적인 지자체가 배려를 받는, 그래서 좀 더 노력할 수 있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자체가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지금 기후위기의 정도로 봤을 때는 사실상 전 자치단체 시군구 단위의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선호도나 관심도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의 정도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서 말씀하신 차등 지원을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하의 전 시군구 단위의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민들의 교육과 여러 가지 탄소저감 활동을 위한 센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탄소중립포인트제도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염태영 위원** 전국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 간 편차도 아주 크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환경부가 제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지자체별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현황을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참여율이 1%도 안 돼요. 어쨌든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점검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러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세 번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수행기관의 추가 지정으로 사업 여건이 제대로 변화되는 것을 담고 있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이나 수자원공사, 매립지공사 보면 원래 부처의 당초 계획 대비 집행액과 이월액을 보면 환경공단은 72%, 수자원공사는 16%, 매립지공사는 12% 이렇게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이게 총배출과 순배출이 있고 사실상 CCUS와 나무 심기 그리고 국제감축분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2030년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도 지

금 통계로 잡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화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CCUS 분야는 현재 실적이 제로입니다. 1100만t을 줄여야 되는데 제로이고요. 국제감축 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이 있어서 실현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제도 자체를 바꾸고 국내의 감축분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염태영 위원** 그런데 사업 수행기관들의 위탁사업 내용으로 보면 계획 대비 집행액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이월시키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설비지원 사업인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서 입찰 계약 과정에서 지원업체의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보면 위반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효율 설비 납품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이 통계는 처음 보는데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자체들의 노력의 정도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요청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꼭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염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이자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행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의하는 과정에 국회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저는 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면서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도 반영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아까 하신 말씀은 ‘거기에 나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정이 되면 국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시기를 놓쳐 버린다……

그래서 그 전이라도 자료를, 협의되는 내용을 알아서 우리 국민이 요구하시는 것 아니면 국회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최소한이라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지 이것을 다른 어떤 정쟁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이자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하기가 정 어려우시다면 의원실에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미리미리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봅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저희가 정부안을 하는 게 확정안이 아니고요. 정부가 최

소한의 부처 간 협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범수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부처 간 협의를 해서 정부의 시안이 나오면 공론화 과정을 당연히 우리 국회하고도 받고 또 시민사회나 전문가 의견도 듣고,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은 그 이후의 단계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러니까 정부의 시안을……

○서범수 위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회의 의견을 좀 반영시키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요 관련되어진 여러 전문가들의 제안된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그것들을 가능하면 공유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한 의견 있으면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의라는 게 사실 오늘 배출권거래제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견해가 있으시면 여기서 말씀하시고 토의를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업무 과정 안에서. 본인은……

○서범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될 이야기를 하지요.

○위원장 위성곤 기본적인 것은 3차 계획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상할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위원님들마다 각자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말씀하시면 오늘 생산적인 회의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 위원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갈 필요가……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별도로……

○위원장 위성곤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질의하라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서범수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035년 NDC 결정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좀 도전적이고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주요 국가에서도 아마 온실가스 관련해서 탄소중립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표명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익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에 기반한 NDC를 수립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봅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2035년 국가 NDC 시나리오에 보면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좀 실현 불가능한 거나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수단이 포함돼 있다 그런 비판들이 있는 건 알

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서범수 위원** 이 비판 자체가 2030년도에 결정할 때도 똑같은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 주셔야 된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었던 과제들도 있고요. 사실상 뭐랄까,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이 수치로 반영돼 있었던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CCUS입니다. 탄소 포집을 해서 석유 채굴했던 거기에 다시 집어넣겠다는 건데 이거는……

○**서범수 위원**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2035년 NDC에 보면 주요 감축수단에 청정수소 기반으로 하는 수소 혼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서범수 위원**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구비해야 될 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직 구비가 안 됐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면 과연, 이런 부분은 좀 추상적이고 비구체적이지 않느냐, 실현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서는 2035년 NDC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계의 전환비용 완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략산업 R&D 지원을 한다든지 저탄소 설비투자 보조금이라든지 전환금융 촉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업지원패키지를 병행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부차관님, 우리도 이것 계획을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업무보고에서도 일정 정도 반영이 지금 돼 있습니다. 마는 기후대응기금을 앞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게 되면 기후대응기금 활용해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산업을 빨리 전환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결국 우리도 윈윈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소중립도 해야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 산업도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워낙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목소리가 커져서……

○**환경부장관 김성환**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같은 경우 에 30만t 규모의 R&D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는데 정부가 3000억 이상 R&D 사업에 투자하고 수소환원제철을 하기 위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서범수 위원** 하여튼 우리 산업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저는 수송 분야 탄소중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새 전기차 꽤점, 단어 아시고 계실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좀 회복세라고는 하지만 더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세계의 자동차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고 내연에 머무는 순간 산업경쟁력 자체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 450만 대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85만 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간 매년 60대씩을 보급을 해야 돼요.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환경부장관 김성환** 60만 대.

○**서범수 위원** 60만 대, 그렇지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

○**환경부장관 김성환** 뒤로 갈수록 속도를 높여 볼 텐데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서 꼭 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이걸 하려면 사실은 노후경유차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별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장관 김성환** 경유차 트럭 분야에 좀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전환하면 지원도 좀 하고 해서……

○**서범수 위원**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이게 21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지금 거의 3% 수준으로 예산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서 이렇다라고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전히 21년도에 249만 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5등급의 노후경유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5년 6월에 144만 대, 한 50% 정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1년도에 비해서 3%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지금은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어서, 과거에는 소위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저감장치를 달았는데 지금은 미세먼지 관리 차원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쪽의 예산을 쓰기보다는 아예 원천적으로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쪽의 예산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기후위기 대응의 전문가셔서 기대가 큰데 그만큼 부담도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장관님, 우리 기후위기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지금 이미 지구 평균기

온 1.5도를 넘었다라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도 폭우, 폭염 번갈아가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어찌 보면 인류는 서서히 끓는 물에 들어 있는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계기상기구가 지난 5월에 지구 평균기온 2도를 이미 언급을 했거든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2도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 5년 안에 세계경제가 붕괴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2℃를 돌파하면.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3년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후퇴해 있고 실제로 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 힘을 내서 더 빠르게 달려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2035 NDC 수립 과정의 정보공개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9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COP에 10월까지의 제출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10월 말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실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장관님 이제 취임하셔서 가지고 폭탄을 맞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지난 2월에 환경부가 탄핵위에 보고서를 내면서 이 2030 NDC 수립 추진 상황 및 계획을 7월에서 9월까지의 사회적 합의 형성 기간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최근에, 지난 14일이네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하고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정부의 2030 NDC 결정절차 가처분 신청 제기한 건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정현 위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29일 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그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관련법이 상정이 됐고 소위로 넘어가고 하긴 할 거지만 9월 이전에 이 법이 통과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적인 상황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꿈수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 개정 없이 2035 NDC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해 놓으면 법이 개정됐을 때 이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이, 사실은 불신이 있는 거지요.

아까 장관님께서 2030 NDC도 지금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035 NDC는 우리가 더 빠르게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고통분담의 전제는 신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건 이 NDC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가자라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것, 지금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대통령님도 수보회의에서 거의 1시간 40분간 이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도 여러 부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시안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그 논의를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약간의 시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COP30에 제출해야 되는 시점과 헌법불합치에 따라서 2026년 2월까지 제출해야 되는 시점이 이게 선후가 조금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아시는 대로 NDC 계획은 제출하면 뒤로는 못 갑니다만 내부적으로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35년까지 NDC 계획보다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법률적 계획이 훨씬 더 강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수정·보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약간 안 맞기는 합니다만 가급적 정부에서도 31년부터 49년까지 만들어야 될 그 법안의 내용까지를 감안해서 35년 NDC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을 먼저 만들고 NDC를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부도 2035년 계획도 법률에 헌법불합치의 취지를 감안해서 최대치를 목표하고 또 분야별 계획도 탄탄히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현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신뢰에 기반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 정부에서 사람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정부가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다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실제로 사회적 합의 형성에 다양한 주체들과 어떻게 합의를, 짧은 기간 동안 논의를 잘 해낼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좀 추진하시고 보고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을지훈련 기간 지나면 곧바로 장관이 책임지고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성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우선 선출되신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박지혜 간사님 그리고 김소희 간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위성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조지연 위원 이소영 간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취임하시고 아마 현장도 다니시고 또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할 텐데 2035년 NDC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되는 그런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조지연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를 들어 보면 10월 말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하셨습니

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정부의 시안은 9월 말 정도까지 하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지연 위원 최종 계획을 10월 말에 확정을 하고 그리고 정부 간의 어떤 협의를 잘 이뤄서 그 시안을.....

정부의 시안은 9월 중순인가요? 9월 말?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9월까지는.....

○조지연 위원 9월까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 할당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이 수치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9월 말에 시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시안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정부의 시안이 확정된다 그러면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특히 이것 때문에 가장 이해관계가 큰 대규모 탄소를 발생하고 있는 기업체들하고는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정부에서 어떤 감축 유인을 어쨌든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상할당을 높이고 특히나 배출효율기준에 따른 그런 할당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 방향성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배출권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역대 최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유상할당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유상할당이라든지 BM 할당 대상을 확대했을 때 배출권 수익금을 감축 신기술의 조기 상용을 위한 R&D 지원이라든지 환경부 업무보고에 기재된 대로 다배출업종 감축사업에 재투자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조지연 위원 그런데 산업부의 업무보고에 보면, 산업부 소관 기금결산현황을 보면 4대 탄소 다배출업종의 제조공정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에는 824억 원 정도 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턱도 없는 금액이

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다배출업종에서 웬만큼, 사실은 4대·5대 주력 다배출업종에서만 저감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도 사실 저는 NDC 목표에 그래도 그나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배출업종에 대한 R&D 지원 없이, 기술 상용화에 대한 그런 것 지원 없이 저는 NDC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요원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 설비지원이라는 것 역시도 1000억 규모로 이렇게 중소 이런 작은 사업에 대한, 소규모 감축사업의 대상으로 이게 지원이 됐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도 사실은 다배출업종으로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최근의 지원 실적을 봤을 때도 유상기업, 그러니까 할당기업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물론 작년부터 지원을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지원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신다니까, 굉장히 이건 부족하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정부지원금으로는 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환금융의 도입이 무조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번 제가 기후특위 때 전환금융 도입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정치적 환경이라는 게 당연히 정권 교체 이런 불안정한 기간이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새 정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와 또 산업부 그리고 금융위까지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보고를 저희한테 따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제가 그 문제까지는 기억을 못 했는데 전환금융 관련해서는 이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도 필요하고 산업체의 전환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과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포함해서 누가 보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가 보고하든 책임 있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것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당의 서범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부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모든 동력의 전동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언제쯤 수립한다라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분야별로 좀 차등이 있고 또 환경부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농기계……

○**조지연 위원** 장관님, 시간이…… 제가 그러면 먼저 좀 질의……

○**환경부장관 김성환** 농기계하고 건설기계, 선박 이런 건 또 환경부 영역이 아니어 가지고……

○**조지연 위원** 그런데 전기차 신차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장관님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 노후전기차에서 또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 그냥 대당 보조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매를 했을 때, 제작했을 때 대당 보조금이 아니라 전환했을 때의 보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의 보조금도 일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신차 구매, 전기차 구매보조금만 있는데 내연차를 전환할 때 전환보조금도 신설해서 예산에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래서 환경부랑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보고를 들었을 때는……

10초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게 조금, 정확한 어떤 입장을 사실은 못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환경부장관 김성환** 기재부안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실무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반영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고……

○**환경부장관 김성환** 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저희도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위성곤** 예, 말씀하십시오.

○**강득구 위원** 지금 임이자 위원님이랑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큰 틀에서 저는 켜를 같이합니다. 내년 2월까지 국회에서 감축목표를 정하라 이렇게 현재에서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정하는 2035 그리고 국회가 정하는 2035 이걸 근본적으로 다를 수가 없다, 방향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큰 틀의 개혁과 방향 설정을 좀 같이 해라 이런 부분들, 그런 입장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9월 중에 NDC 시안 만들고 10월 중에 그 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9월 이후에 하면 한 달 정도입니다. 그러면 개별 위원들이 입장 정리하고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그러면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과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입장에서 저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취지와 의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님이나 서범수 위원과 저는 분명히 입장을 같이한다. 그리고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강득구 위원** 그러면 본질문 시작할까요?

○위원장 위성곤 예, 질의하시지요.

○강득구 위원 제가 첫 번째 고민하는 무계의 중심은 2035 NDC에 있습니다. 학계랑 시민사회에서는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소위 톱다운 방식으로 2035 NDC를 수립해야 한 다라고 대체적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런 데 정부는 2035 NDC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이걸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장 관 입장……

○환경부장관 김성환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새 정부 기조에 맞 게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지난 3년이 아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까지 상향식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문제가 있었고 이 로 인해서 감축목표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성환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큰 틀의 우리 감축목표 이 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현 정부의 기조, 입장 이런 부분 속에서 큰 틀에서 보팀업보다 는 톱다운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득구 위원 예.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30년 재생에너지목 표를 신재생에너지 기준으로 30,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28%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걸 신재생 기준 21.6, 재생 기준으로 18.8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얼마냐……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성환 장관께서 말씀하신 지난 3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취지와 의도는 알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부장관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고 기후위기의 심각 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문성 포함해서 큰 틀의 정무적 입장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지 금 입장에서 보면 김성환 의원이 장관으로서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역할을 맡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고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수보회의에서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 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배출 권거래제에 대한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환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73%를 배출권거래제 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발전소, 주요 제조업 부분들이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것 아 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공 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배출권 가격인데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

은 현재 톤당 1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갖고 정책목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4차 할당계획에 어떻게 할 거냐, 정책에 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유상할당 비중을 특히 전환 부분에서 높여야 됩니다. 참고로 아시다시피 유럽은 유상할당이 전환 부분의 100%입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상할당 확대 이 부분도 대체적으로 여야 위원들 다 떠나서 동의하신 겁니다, 방향.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발전 부분의 유상할당은 2030년까지 50%로 점진적으로 가겠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제가 알기에는 1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구요.

그리고 배출허용총량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출권거래제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73%인데 나머지 27%에 대한 부분들, 농업·축산·건축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갖고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에 좀 더 많은 역할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출권거래제 총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당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김성환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특히 전환 부분의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과 한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은 전기요금제도가 사실상 시장에 맡겨져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할당의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냐는 건 조금 다르고요.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시장, 예를 들면 전기요금체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넘어야 할 난제들이, 풀어야 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도 우리가 그래도 풀어야 될 과제잖아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강득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환 장관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전체적인 틀 이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런 관점에서 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게 제 요청입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시장안정화 예비분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허용총량을 좀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환경부장관님, 저희 오늘 배출권거래제 방금 강득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조금 더 이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후대응기금 재원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유상할당 비중 상향이라든지 배출권거래제 규제 강도를 높여서 가격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아

이디어들이 오늘 나오기는 했는데 환경부 보고자료에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잉여분에 대한 것인데요. 3기 배출권 기간 동안 누적 잉여량이 최대 1.4억t에 이를 수 있다……

지금 이 누적된 잉여량을 만약에 기업이 2030년에 쓴다 그러면 사실 아무리 배출허용총량을 지키더라도 우리나라 NDC 달성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누적된 넉넉한 할당으로 인해서 시장에 쌓여 있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잉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시장 안정화 예비분으로 흡수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지혜 위원** 지금 해외, EU에서 했던 사례들을 보면 배출권이 과잉 공급돼서 배출권이 하락하는 문제가 초기에 유럽연합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연합은 경매를 이연하는 조치까지 취했었거든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게 잘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금 공격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누적된 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NDC 달성 우리가 꼭 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1.4억t이면 연 배출허용총량의 몇 %인가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EU에서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시장 환경에 맞게 저희가 검토해서 하면 되니까요, 공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유상할당 비율 같은 경우에 전환 부문 100%를 많이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중간하게 50%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를 하면서 기업의 간접배출로 지금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그 부분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배출권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성환** 대통령님이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저감 과정에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가정에 전기료 인상이 너무 급격하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한국적 상황에 맞게 유상할당 비중도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럽처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혜 위원** 저는 그렇지만 그 맥락에서도 100% 유상할당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캘리포니아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100% 유상할당을 하면서 조성된 재원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는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류하는 그런 조치를 같이 취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유상할당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다면 마련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한국기후변화학회에서 낸 자료를 보면 2030까지 발전 부문 유상할당을 100%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경우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보다 GDP가 오히려 0.37% 증가한다는 정량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탄소 감축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100% 유상할당을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저는 다음 질의할 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한말씀만 올리면 일단 발전 부문은 유상할당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면서 소위 탈탄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유도하고요.

그리고 다배출 기업들은 배출허용총량을 과거에는 너무 느슨하게 해서 탄소를 저감할 유인효과가 없었는데 일종의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포함해서 무상할당 하되 무상할당의 총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시장에서 새로운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무상할당 받은 기업들도. 그런 것을 통해서 유상과 무상의 기업들과 발전사들이 탈탄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엄격하게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상으로 기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탄소 다배출 산업에 관련되어진 R&D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축이 되고 있나요, 통계적으로? 어떨까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외형상은 좀 줄었는데 그게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소위 시장 상황상……

○위원장 위성곤 생산량의 축소로 인해서……

○환경부장관 김성환 생산량의 축소로 인해서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이 실현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반도체 영역은 상당히 투자를 해서 반도체 영역은 좀 줄었는데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시멘트 이쪽은 다배출 업종이면서도 그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적어서 그쪽 영역에서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혁신보다는 시장 상황 때문에 줄어든 여지가 있어서 그게 앞으로의 매우 큰 숙제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산업부 관련되어서 관련 기업들을 점검했더니 실질적으로 설비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질적 설비 지원도 되고 있지 않은 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득구 위원님께서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바는 어떤 거냐면 배출권거래제 관련되어서 관련되어진 정부 논의 내용을 달라는 것이었고,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소원과 관련되어진 것은 NDC 감축경로 31년부터 49년까지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거나 9~10월이라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우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또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이것을 공론화 하기

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현재 얘기를 했는데 취지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입장 속에서 해 달라 이런 겁니다.

○위원장 위성곤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되어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관련되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향후에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 나가겠고요.

장관님, 2035 NDC 관련해서 앞서 얘기한 9월 말까지 정부 초안을 마련해서 공론화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장 위성곤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회도 관련된 논의를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헌법소원 관련해서 31년부터 49년까지 계획은 언제쯤 정부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 로드맵은 세부적으로 아직 세우지 못했는데요. 어차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그 부분도 별도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내년 2월까지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무가 주어진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 나갈 텐데 저희들이 논의해서 법안을 의결하면 정부가 받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기초 자료를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탄독위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무차장님.

배출권거래제 관련되어서 추진 상황을, 탄독위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예.

○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지금 유상할당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작년 12월 달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발전 부문에서는 대폭 수준 그리고 대폭의 수준에 관해서는 정부 내의,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내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심의했을 때 일부 탄독위 위원님 같은 경우는 발전 부문은 100%까지 가고 전력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류하는 것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였고,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 내에서 대폭이라는 그 용어에 맞게끔 대폭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지금 정부 내 자체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 내 논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 탄독위 위원들, 전문위원들 논의를 본격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 부문이라든지 이쪽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들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구체적으로 경총이나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발전 부분에 대한 상향 수준을 수치로 제공한 적은 있습니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아직까지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의견을 따로 받아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환경부도 받아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업계 의견을?

○환경부장관 김성환 업계에서 이미 발표하신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문제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업이나 산업군하고는 내용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결국은 잉여되어진 배출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시장을 정상화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장관님.

○환경부장관 김성환 제도 설계의 허점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잉여량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새로운 제도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련되어진 것을 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기간 동안 제외하는 방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제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위원장 위성곤 총거래량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래를 제한적 조치를 두고……

○환경부장관 김성환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장 위성곤 1차 질의 모두 마쳤고요, 보충질의는 3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화장실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화장실 등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위성곤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차관님, 다 의석 정돈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 시간을 3분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 합니까?

(「3분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3분 하고 플러스 1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분 추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넉넉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3분 하시겠다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산자부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김정호 위원 에너지믹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빨리 확대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 해상풍력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이 풍부한 서남해나 제주도나 이쪽은 이미 계통이 포화 상태라 31년 말까지 신규사업 인허가를 중단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중단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들 좀 보고서 일부 가능한 부분들에서……

○김정호 위원 그게 바뀐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허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어쨌든 그러자면 일단 서남해 쪽은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특히 해상으로 HVDC를 하자면 하나는 수도권에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수도권까지 올리는 원거리 HVDC가 있을 테고, 육상은 포기하더라도. 그런데 그쪽은 그렇게 하지만 아예 서남해 쪽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고전력·에너지 다소비 산업들, 예를 들면 AI 데이터센터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이쪽으로 유치해서 본사나 공장을 옮기게 하게 된다면 굳이 송전망을 그렇게 깔지 않아도 짧은 거리에서 교통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 부분이 또 하나가 있을 테고 또 재생에너지 부분으로 기존 산단에 RE100을 실현하는 RE100 산단 그것도 대안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하려면 유인이 제공돼야 되는데 그게 지역별 요금 차등제, 이게 원거리 송전에 따른 송전ロス(loss)를…… 로스 한 4% 되지요, 4% 가까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김정호 위원 그리고 송전망 설치하는 인프라 설치비가 세이브되고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지역별 요금을 차등으로 해서 여기 가까운 거리에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 전기요금을 싸게 해 주면……

1분 더 쓰겠습니다.

싸게 해 주면 해결이 되는 것 아니냐.

안 들어왔습니다, 1분.

○위원장 위성곤 아니, 안 주기로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5분 주겠다고 했는데 3분만 쓰시겠다고 해서……

○김정호 위원 아니, 3 플러스 1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위성곤 아, 1요?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위성곤 5분 쓰시라니까 꼭 자꾸……

○김정호 위원 일단 1분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위성곤 1분 드리도록 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분을 빨리 확대하고 송전망에 대한 그런 인프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을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

으로 옮겨 오게 하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빨리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서 에너지 대전환에 또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대체로 동의하시지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전에도 동의했었고요.

○**김정호 위원** 아, 그랬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송전망 회피 편익을 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산지소(地産地消) 형태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로 가야지만 송전망을 짓지 않아도 되는 회피 편익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전기요금이라든지 체제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유연성 자원들이 지역 내에서 거래될 수 있는 관련 시장제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RE100 산단이라든지 지역의 마이크로그리드, 차세대 전력망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들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빨리 기후에너지부로 개편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효능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위원장 위성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환경부장관님, 앞서도 언급이 됐는데 지금 배출권거래제 3기가 운영 중이고 내년부터 4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3기에서 남은 배출권이 4기로 넘어가는데요 3기 잉여량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대략 1억t에서 1억 4000만t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 1억 4000만t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1억 4000만t이라고 하면 올해 국가 전체 할당량의 4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들이 제대로 감축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국가배출량이 대폭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부가 공짜로 나눠 준 배출권이 1억 4000만t이 남아서 기업들이 재산권처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저는 이게 여야를 떠나서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상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번 3기에서 남아도는 잉여량 1.4억t이 그대로 4기에 넘어가서 유통이 되면 배출권거래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가격이 여전히 1만 원대를 못 넘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본인의 감축 노력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이익을 보는 봉이 김선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맞습니다. 가격 정상화 물 건너가고요 감축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남아도는 배출권이 돌아다닐 거고요.

그래서 이 잉여량을 기업들이 재산권처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회수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4기 할당을 할 때 이만큼의 양은 빼고 사전 할당을 해야지만 내년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4기 시장이 망가지지 않고 이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잉여량만큼은 예비분으로 이것을 설정해서 배출권 과다 공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산업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업부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일정 정도 기업들이 도전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산업들이 인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최대한 노력하되 그것도 고려해야 됩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차관님, 지금 산업부 업무자료를 보면 예비분 설정을 3기 평균 수준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은 지금 잉여량을 예비분으로 잡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4기 시작과 함께 1억 4000만t짜리의 폭탄을 시장에 던진다, 그대로 었는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배출권거래제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출권이 남아돌아서 또다시 아무도 감축을 안 할 거거든요. 배출권 가격은 또 똥값이 될 거거든요. NDC 달성도 물 건너갑니다. 이런 게 뻔히 예상되는데 우리가 왜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잉여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배출권거래제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할당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예비분으로 설정하는 것만이 4기부터는 고장 난 배출권거래제를 정상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상 작동하고 일정 정도 가격이 시그널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결국 그런 가운데서도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소영 위원** 환경부장관님, 1억 4000만t 반드시 예비분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충분히 만들어서 일종의 배출권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탄소배출권에 이런 잉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기업에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조금 전에.

○**환경부장관 김성환** 엄격하게 하는 게 배출권거래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소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회수하려고가 아니라…… 왜냐하면 주어진 때 무상으로 주어진 때 때문에 이걸 소각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걸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말이 강조가 되면 아마 기업들의 반발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동시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소각 같은 방법이 가능한지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걱정 수준에서 이걸 앞으로 제한할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아시겠습니까만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탄소배출을 시장에서 매입하는 가격과 기업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긴장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소각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수가 안 되면.

아까 하던 것 계속 이어 가 볼 텐데요.

장관님, 식량작물을 정부에 비축하는 것, 이것 적응대책이 맞습니까? 예산 문제를 좀 보려고 그러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글썄요, 그것도 큰 틀에서는 적응대책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요? 그런데……

○환경부장관 김성환 왜냐하면 기후재난 때문에 갑자기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형배 위원 그런 논리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정신건강 사업, 정신질환 유병률 조사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 실태조사 이것은 적응대책입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잘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국도 포장 보수·정비하는 도로 유지·보수, 기후위기 적응대책입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말씀드린 국도 포장 보수·정비 이게 적응예산으로 해서 38조나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이런 걸 해 놔거든요. 올해 7월 29일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적응대책별 재정사업 선정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챙겨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잘 챙겨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어쨌든 다른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환경부장관 김성환 여하튼 총괄 부서로서 전체 내용에 불합리함이 없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이 예산 구성에 관해서 챙겨지시는 대로 저희 의원실로 주시면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장관님, 두 가지 건을 간략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염태영 위원 탄소감축, NDC라든지 또 이후에 나올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는 좀 피해 가려고 그러합니다.

우선 2018년부터 있었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 혼선 생긴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염태영 위원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이 그에 대해서 투자를 다 준비해 놔다가 막심한 피해로 한때 19개 업체, 1000여 명이 종사하던 산업, 이를테면 종이 빨대가 대안으로서 준비했는데 현재 6개 업체만 명맥이 유지되고 도산, 폐업, 압류, 휴업, 그래서 11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어요.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진 탓에 기업들은 설비와 재고 손실로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런 기업을 도산시키는 일들을 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조속히 복원하기도 해야겠지만 또 이렇게 산업 피해를 받은 이분들의 요구와 현재 피해보상 그리고 실제로 친환경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혼선이 없도록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국회에서 ‘기후재난 시대, 환경교육은 생존교육이다’ 하는 토론회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과장님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참 안타깝고 가슴 아린 일이 고등학생 1명이 참여했는데 기후위기 전문가를 꿈꾸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접할 시간 자체가 없고 환경수업과 환경교사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이 없고 또 통합적인 교육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이 제안한 대안이 ‘공교육 내 최소 교육시간을 보장해 달라. 기후환경 과목 필수 개설해 달라. 아동·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설해 달라’ 이런 현실적인 제안이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만들고 제안해야 될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2000년부터 만들어진 환경교사제도, 환경교원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90명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뽑아 놓은 게 그렇고요. 현재 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79명을 선발했는데 2022년에 41명이었다가 지금 31명입니다. 광역 단위로는 1명도 없는 데가 여덟 곳이나 됩니다. 현재 그것도 교사 1명이 2개 또는 5개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 교사……

저는 1분 더 줘도 되지요?

○위원장 위성곤 예, 1분 더 쓰십시오.

○염태영 위원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환경수업 예산이 한 교사당 평균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녹색성장 사업이나 또 탄소중립 실천학교 사업 이런 외부 사업을 따와서 그걸로 수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교는 학년 교과로 채택한 학교가 10%가 안 되고 또

고등학교는 한 20% 안팎으로 있습니다. 1000개의 학교에 지금 교사는 30명 있는 거지요.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있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내실화 있게 통합교육으로 하고 있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적합한 환경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그 외에 환경교육 제도개선으로 열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들이 만든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건 별도로 드리고 또 아마 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테니까 장관님이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문제인 정부 때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해 보자고 강득구 위원님하고 상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교육부장관후보자가 지금 내정된 만큼 장관으로 취임하면 환경부와 교육부가 협업해서 학령기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서 기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염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현재 배출권 가격이 8700원 정도지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서범수 위원** 원래 이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것 설계할 때?

○**환경부장관 김성환** 대체로 2만 원에서 4만 원, 5만 원 그 언저리 정도로 형성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때 한 2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배출권에 대한 목표 가격은 얼마로 보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것을 목표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유럽은 지금 대략 한 10만 원 정도 가는데요……

○**서범수 위원** 우리.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기업의 혁신을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두세 배 이상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한 3만 원 정도로 보시는……

○**환경부장관 김성환**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서범수 위원**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한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배출권을 사는 것과 탄소감축 투자 간의 긴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보십니까, 그 정도가?

○**환경부장관 김성환** 액수까지를 제가……

○**서범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배출권 가격이라는 게 결국 시장에서 하는 거라서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예상 못 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시장안정화 예비분이 그 역할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4차 배출권거래에서부터는 산업·건물·수송 부분이 발전 외로 통합되었습니다. 하나로 통합됐어요. 그렇지요? 산업·건설·수송 부분이 발전과 발전 외로 나뉘져 있었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서범수 위원** 기존에는 전환·산업·수송·건물, 딱딱 구분돼 있었잖아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것은 NDC……

○**서범수 위원** NDC 이야기도 되지만……

○**환경부장관 김성환** NDC 구분하고 배출권거래제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서범수 위원** 조금 다릅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건 기존 그대로, 변화된 게 아니고……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범수 위원** 기존의 발전과 발전 외로 그대로 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빠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CFE(무탄소에너지) 인증 및 거래제도 이것은 결국은 재생에너지에 국한된 RE100을 좀 보완하자, 그래서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무탄소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경제계의 요구가 있다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서범수 위원** 원자력이나 수소를 포함해서.

○**환경부장관 김성환**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조금 앞선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아닙니다. 발전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면서 소위 석탄과 LNG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빨리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목에서 원전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그런 인식하에, 제일 중요한 건 법제화되는 부분이 결국 제일 중요할 것 아닙니까. 법제화가 돼야 우리 기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나 고동진 의원께서 아마 이

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지금 현재 11차 전기본이나 그게 일정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정부 공약에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만들어지면 기후대응기금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기재부차관 답변은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하지만 관리라는 측면에서 기재부가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관리라는 측면보다는 어떻게 쓸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회계가 다른 회계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내용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동의합니까 반대합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기재부가 그 기금을 만드는 역할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주무 부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우리 시민사회단체 포함해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면 관리라는 효율적 측면은 기재부 입장이지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큰 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고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아까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환경정책이 집행되는 상당 부분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의원님은 구청장도 지내시고 지방의원도 지내셨기 때문에 지역이 갖고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환경중립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후대응기금을 지역에서도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역 기후대응기금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 기재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위성곤** 기재부는 차관님이 안 계시고요.

○**강득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재부 국장, 입장 간단하게……

○**위원장 위성곤** 마이크로 나오셔서……

○**강득구 위원** 시간 좀 스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니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조례로 기후대응기금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설치가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후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 기후대응기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중앙의 기후대응기금을 일정 정도 지방으로 넘기고 큰 틀에서 지역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역 기후대응기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지역에서든 기후 대응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재원의 소스를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득구 위원**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도 그렇고 그리고 지방자치·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시대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에 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라는 게 제 부탁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1년의 새 정부 큰 틀의 기후 관련된 정책이 5년, 10년의 기후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나 산자부나 환경부의 입장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큰 틀의 대통령 말씀대로 가야 할 길이다라는 전제에서 고민을 해 달라.

두 번째, 우리 정부 부처 관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다, 국민참여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철학과 국정기조 거기에 따른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정부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 입장에서 우리 부처의 장관들이 큰 틀의 방향을 잡아 주면 적극적으로 하나가 돼서 그 방향 속에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제가 관료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감안해서 잘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다시 말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정책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방향을 잡는 것 이것이 관료에게 주어진 역할과 시대적 소임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장관님, NDC나 배출권 관련해서 저희는 러프한 숫자라도 나오길 기대했는데 이번에 아무런 숫자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고.

○**환경부장관 김성환**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출 시기가 타이트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논의할 시간이 너무 없다는 지점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술작업반에서 2035년 NDC 수치 작업하고 있는 것 몇 가지 들었는데 실은 이 시나리오가 1·2·3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그 시나리오는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돌아다니면서 국제사회의 기준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성환**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소희 위원** 그런 소문 안 나오게끔 저희가 그런 시나리오를 그래서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너무 깜깜이였고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안 하니까 산업계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기술작업반 작업하실 때 산업계도 처음부터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산업연구원이나 산업계 의견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시나리오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030년 40%처럼 딱 숫자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인지 형태로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그걸 좀 고려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레인지 형태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제시할 때. 딱 어떤 한 숫자를 지정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려면 레인지 형태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환경부장관 김성환** 초안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신 거지요?

○**김소희 위원** 아니요, 최종 제출할 때도. 이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환경부장관 김성환** 최종 제출은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환경부 보고자료 보면 2페이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중 꼴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환경부가 에너지 쪽을 잘 몰라 가지고 이런 문장을 쓰신 것 같습니다.

산업부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물론 국가별로 에너지 믹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가 갖고 있는 에너지 포션 상태……

○**김소희 위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다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의 국토 면적당 태양광 밀도는 OECD 수준에서 몇 위 정도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태양광만으로 놓고 보면 다른 나라, OECD에서도 일단 중상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2024년 태양광 밀도를 봤을 때 국토 면적당 3위 찍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38개국 중에서 37등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중에 수력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평지보다 산지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지요?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니까? 송배전이지요. 송배전 깔려면 비용 필요하지요? 그 비용 필요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 인상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송배전이라든가 재생에너지를 우리 그리드에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은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소희 위원**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얘기해야 된다’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보급한다 하고 전기요금을 한 번도 안 올렸고 윤석열 정부 때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습니다. 지금은 재생에너지 늘리려면 전기요금이 일단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일본 대비 지금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수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일본보다는 저희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일본 가정용 전기요금이 2.5배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반영해 가지고 여기 ‘유사한 일본보다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항들을 따져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 국민들한테 소상히 좀 밝히고 진짜 하시고 싶으면 예산을 까고 ‘이런 비용이 듭니다’라고 해서 ‘이 비용을 다 같이 부담해 주시지요’라는 설명을 저는 이번 정부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답변하실 내용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아니요.

○**위원장 위성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산업부차관님, 지금 송변전 설비 보급은 어떤 발전원인지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특정 전원……

○**박지혜 위원** 지금 출력 제한이 가장 많이 걸리고 있는 지역들이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출력 제어가 가장 많이 걸리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송배전망 확충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에도 송전 제약이 걸리고 있지만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동해안에서도 지금 송전 제약 때문에 발전소를 못 돌리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동해안 쪽에 걸리는 송전 제약 문제도 풀기 위해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망 확충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비용을 모두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에 얹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지난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민자 석탄 배출량 누락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었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그걸 다시 검증하는 시스템들을 정비했고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물량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제3차 계획기간 내에 꼭 교정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꼭 부탁드립니다.

통계 산정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태는 사실 기초자료에 대한 신고가 미비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의 통계 제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활동 자료가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기존의 보고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관련된 보완 대책, 재발방지 대책은 좀 더 보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님, 저희 국가 온실가스 통계요 통계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2년 걸리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렇지요. 2023년 배출량이 아직도, 최종 통계가 확정치가 올해 말에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잘 한다고 얘기를 하려면 가안이라도 연말·연초에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각 소관 부처에서 통계를 산정하는 데만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한 과정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소위 잠정배출량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최대한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배출량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잠정배출량 기준으로 전년도의 감축 정도를 평가해야만 환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선부른 얘기는 합니다만 탄녹위의 제도개선과 함께 그것을 서포팅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게 온실가스정보센터에도 있고요. 기구가 흩어져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조금 더 정밀화,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효율적으로 잘 관리됐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사실 산자부에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 통계, 2023년 잠정치가 2024년 12월에 발표되고 확정치는 올해 6월에 나왔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도 작성 주기를 좀 당겨야 된다, 저희가 측정을 잘 해야 관리도 잘 되고 목표 달성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조치도 더 빨리 세울 수 있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성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탄녹위 보고자료에 보면 탄녹위에서 분과위원 워크숍을 2025년 4월에 했고 부문별 전문위원 회의를 25년 6월에 개최를 했어요. 그때 보면 NDC 수립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그다음에 GIR 기술작업반 시나리오 등을 검토·논의를 했는데 관련되어진 시나리오들이 실제 작성됐나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우선 말씀드리면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검토했던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본 것은 아니고요 감축 수단에 대해서 어떠한 감축 수단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관련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가 있나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 김종률 예, 관련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고요. 다만 정부안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협조에 의해서 비공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부안이 발표되면 다 공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35년 NDC 목표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기후위기대응기금에 관한 결산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신가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박정현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염태영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차지호 위원님, 이현승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처 및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좌 직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탄소중립기본법심사(10인)	김원이 민형배 ◎박지혜 염태영 이소영	더불어민주당(5)
	김소희 이현승 임이자 조지연	국민의힘(4)
	서왕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11인)	강득구 김정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6)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박지혜 이소영 차지호	
	◎김소희 김용태 서범수 조은희	국민의힘(4)
	김종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9인)

강득구 김소희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민형배 박정현 박지혜 서범수 서왕진
염태영 위성곤 이소영 이현승 임이자 조은희 조지연 차지호 한정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한석현
전문위원 성소미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김성환
차관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직무대리 조익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김종률
기후정책국장 성호철